

동향분석 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14호

2016. 01

종합진단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

경제 · 생활 | 농업 · 먹거리 | 정치 · 환경

종합진단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 _ 3

경제 · 생활

세계경제 흐름 _ 7

한국경제 전망 _ 10

생활양식의 변화 진단 _ 14

협동경제 영역의 현황 및 과제 _ 20

농업 · 먹거리

수입 농산물과 농지 파괴로부터 농업을 지켜내는 노력이 중요 _ 23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가속화 시킬 TPP 가입에 대한 우려 _ 25

GMO의 확산 우려와 위해성 논란 _ 27

귀농귀촌 지원 법률의 제정 의미와 과제 _ 33

정치 · 환경

공멸을 향한 갈등에서 평화를 통한 공존으로 _ 35

파리 기후변화 총회 결과와 의미 _ 38

유리병 재활용정책 동향과 재사용 활성화 방안 _ 41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

- 경쟁과 이윤을 앞세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와 부작용이 세계적으로 확인되면서 성장시대의 신화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 이익은 사유화 한 채 부담과 책임은 다른 곳으로 떠넘겨버리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 생존의 토대인 자연생태계와 공동체적 이웃 관계를 빠른 속도로 파괴해 왔다.
- 생존을 위해 빈곤과 결핍을 해결하고자 생산력 증대에 힘써온 그동안의 노력과 관성들이 성장의 한계와 부작용들로 인해 지금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 몇 십만 년의 인류 역사 중 불과 한 세기 동안에 총량적인 성장 규모는 수십, 수백 배로 커졌지만 지구상에 빈곤은 사라지지 않았고, 불균형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으며,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문명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생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전쟁 후 60년의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3만 배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은 4백 배 이상 증가해, 수출규모 세계 7위, 국내총생산은 세계 15위 수준의 성과를 이뤘지만, 성장 규모와 실제 삶의 괴리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 1인당 석유소비량 세계 5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수입명품 시장규모 세계 2위 등 우리나라 소비 규모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오랜 세월 동안 일하면서 더 많이 피로해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또래 청소년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쓰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빈약한 복지기반에 노후 대비가 부족한 우리의 노년세대 삶에서도 확인된다.
- 세계적으로 높은 자살률에다 낮은 행복도는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삶의 현 주소다. 작년 3월,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순위는 118위였다. 우리나라 성인 36%가 스스로를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조사도 나왔다.

- 그런데 성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사회의 문제점들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더 많은 성장’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지금의 사회를 지배하는 관성이자 주류의 논리다.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존 등 제반 영역들은 ‘성장’을 전제로 한 후속 과제들로 이해되고 다뤄지고 있다.
- 현실 인식과 접근 방식에서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영역도 이 부분에서 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성장이 되어야 분배나 복지도 실현가능하다는 입장과 균형적 분배나 안정적 복지가 결국 성장을 촉발하는 동력이 된다는 입장 모두 ‘더 많은 성장’을 전제하거나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계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고 저성장이 장기화, 고착화 되는 가운데 성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시스템과 지식, 경험들이 빠르게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 양적 성장의 시대를 넘어서 질적 전환을 통해 성숙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필요하다.

- 예전과 같은 고속성장, 고도성장, 지속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예사롭지 않은 상황을 대변하듯, 지금 상황을 ‘저성장 시대’로 진단하면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금의 저성장 상황을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장시대의 위기를 ‘재성장’, ‘신성장’ 전략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는 그동안의 고정관념, 삶의 방식, 의존해온 시스템 자체에 거대한 도전이 일어날 것을 말해준다. 벌써부터 사상 최대의 부채와 청년실업 속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갈등과 불신, 불안과 공포로 점점 극단화 되고 있는 현실을 ‘지옥’(헬조선)으로 규정하고, 포기하고(이생망) 떠나려 하고 있다.
- 결국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 할 것 없이 사회 전체가 생존의 차원에서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 ‘성장시대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단

경제위기 때문만은 아니다. 성장과 행복이 연결되지 않는 사회적 위기이다, 작년 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만큼 생태위기 문제도 심각해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성장이 가능하더라도 지속시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존과 같은 방식과 수준의 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사실은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런 전환의 가능성들은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가 저임금, 저소득,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현상과,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팽창을 거듭해오던 기존의 성장 패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도시화와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 속에서 ‘마을’, ‘동네’, ‘이웃’이 강조되고, ‘재생’과 ‘협동’, ‘농업’, ‘공동체’가 새로운 가치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환경의 변화가 곧 바람직한 변화를 보장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득권과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상력과 변화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읽어내는 안목, 그리고 낮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움을 선택하는 용기가 전환을 꿈꾸는 모두에게 필요한 때다.

- 성숙사회를 향한 탈성장 전략을 협동운동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때다.

- 당면한 성장사회의 위기는 기존 상태로의 복원이나 복구가 아니라 낡은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장사회에 대한 대안 역시 기존의 사고방식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즉 ‘탈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 탈성장을 위해서는 생활양식과 구조, 시스템의 동시적인 전환을 통해 자립과 공생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성장경제에 의존해 온 국가와 시장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돌보고 발전시켜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자신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외부의 능력 있는 해결자나 대리인에게 더 이상 맡기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해결해나가는 힘을 길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소득을 가지고 시장의 교환경제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재분배 체계에 의존해서 살아가기에는 다가올 시대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 따라서 필요한 생활재를 손기술을 익혀 직접 만들고, 장터를 열어 함께 나누고, 지역의 이웃들과 서로 돌봄 체계를 만들고, 협동노동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일 등 삶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영역들을 적극 만들어야 한다. 결국 자율과 자립, 자치는 성숙사회로 가는 핵심 가치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이 오랜 세월 중요하게 지켜온 원칙이기도 하다.
- 성장사회의 위기는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생활 영역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적 지속가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최근의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생활협동조합의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협동조합이 사업적 위기를 성장시대의 논리로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양적 성장사회에서 질적 성숙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협동조합운동의 시대적 역할을 적극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먹거리, 교육, 의료, 보육, 복지, 일자리, 안전 등 국가와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삶의 과제들을 민간의 자발적인 힘으로 상호부조의 관계망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협동조합운동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을 적극 살려내야 한다.
- 마침 올해는 ‘한살림’이라는 이름으로 생명협동운동을 시작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일찍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관통하는 현대 산업문명의 한계를 넘어 서고자 했던 한살림운동의 문제의식은 오늘날 양적 성장사회를 질적 성숙사회로 전환시켜내고자 하는 시대적 과제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성숙사회에 대한 전망은 사회전체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이자 새로운 30년을 향한 한살림운동의 비전이자 과제이기도 하다.
- 세상을 정화시키고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3% 소금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전체 2천만 가구의 3%에 가까운 한살림의 조합원 조직이 사회 속 소금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내적 결속과 역량을 길러내야 한다. 그 성숙된 힘을 바탕으로 성장시대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조합원의 삶의 필요들을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고, 깊은 소통과 따뜻한 연대로 살림의 그물망을 다양하게 엮어서 한살림운동을 확장해나갈 때 성숙사회도 한층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세계경제 흐름

－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활력이 떨어진 이후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까지 5%대의 높은 성장을 보인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기침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른 신흥국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겹쳐서 2016년 세계경제 환경은 불투명하고, 저성장 기조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진국 경제는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유로화와 엔화의 약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약세로 생산비용이 낮아져서 수출 확대가 예상되나,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부진으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
- 미국: 생산, 소비, 고용의 개선으로 내수에 기반한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대신,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의 부담으로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내년 성장률이 2% 초반대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엔화 약세와 저유가, TPP 가입 등으로 수출에 다수 유리한 상황인 반면, 임금의 제약과 소비가 부진으로 경제적 활력이 위축된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담도 존재함.
- 유로존: 높은 실업률 속에서 양적완화에 따른 투자확대와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의 경기 둔화는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특히 중국과 교역이 많고 원자재를 많이 수출하는 신흥국들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 중국은 수출과 투자, 소비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5년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인 6.9%를 기록했으며, 올해 2016년 경제성장률은 그보다 더 낮은 6.5%로 전망하고 있음.
- 투자와 소비 등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부채도 빠르게 증가해 2007년 7.4조 달러이던 부채가 2014년 2분기에는 28.2조 달러에 달함. 최근에는 중국 주식시장의 폭락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서 일각에서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기도 함.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 경제의 위기가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런 가운데 중국은 2016년부터 경제성장률 실적을 발표하지 않기로 함. GDP에 근거한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전략을 지역발전과 내수 활성화로 돌리겠다고 함.
- 중국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중국 경제의 질적 개선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와 성장의 지속성을 높여 ‘새로운 정상상태’에 도달하겠다는 소위 신창타이(新常态)를 중국 국가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함. 또한 2015년 10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해오던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으로 바꿈.
- 이런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는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상호 의존성이 특히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기준 금리인상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화 되고 특히 부족한 외환보유고에 외채 수준이 높은 신흥국들의 경제가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년 반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됨.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고 상승 폭도 크지 않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부채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의 경우 외국의 투자자본이 대량 이탈하고 이로 통화 가치 하락 속에 채무부담이 커지는 등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

입.

- 상대적으로 외환보유액이 많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추세가 계속되면 결국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및 가계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음. 벌써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우리나라 저축금리와 대출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 2~3년 후 연 3~4%까지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결국 4% 안팎 수준으로 올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커지고 부동산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향후 몇 년간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소비의 위축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
-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은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해 가공, 판매하는 우리나라 식품업체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저유가와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원수출국들의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수출경제에도 부담을 줄 전망이다.

- 세계경제의 침체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데다, 최근 들어 중국의 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낮아지면서 원자재를 수출해온 신흥국 경제가 크게 약화되고 있음
- 2015년 말 현재 두바이유가 31.8달러로 떨어지면서 2004년 6월 이후 11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이런 저유가 상황은 선진국 소비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원자재 수출비중이 높은 개도국은 수출부진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특히 우리나라는 중동과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아 저유가 상황이 수출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음.
- 경기 침체로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미국의 셰일오일 및 원유 수출 재개, OPEC회원국의 원유공급량 확대 등으로 저유가 상황은 계속 이어져,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다만, 연초부터 중동의 양대 국가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종파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산유국들의 정치적 불안정이 향후 세계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함.

한국경제 전망

-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계속되어 2016년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보다 더 낮게 보고 있다.

- 2000년대 들어 경제위기 전까지의 평균 성장률이 4.6%였던 것이 경제위기 이후 3.0%대로 떨어짐. 구체적으로 2014년 성장률이 3.3%였는데 2015년에 2.6%대로 떨어졌고, 2016년에도 2%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관별 예측 상황을 보면,
 - 국내기관: 한국은행 3.2%, 한국개발원 3.0%, 현대경제연구원 2.8%, LG경제연구원 2.7%
 - 해외기관: 골드만삭스 3.3%, IMF 3.2%, 무디스 2.5%, 노무라경제연구소 2.5%, 모건스탠리 2.2%
-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하지만 세계경제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2% 초반대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등 ‘대외적 측면’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급증하는 가계부채, 고용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구매력 약화 등 ‘대내적 측면’을 들 수 있음.

- 수출기반 성장경제의 한계¹⁾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교역 자체가 부진해지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1960년 이후 한국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 1998년 외환위기(-2.8%), 2001년 IT 버블 붕괴(-12.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3.9%), 2012년 유럽 재정위기(-1.3%) 등 4번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의 수출기반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음.
-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일본과 EU에 대한 수출 전망이 밝지 않고,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경기 둔화, 신흥국의 경기침체 또한 우리의 수출경제에 부담을 주고

1) 원종현, 2015, “중국의 신경제체계 구축 관련 주요 이슈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086호,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참조.

있음.

- 특히,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뒷받침해오던 중국경제의 성장전략 변화와 성장을 둔화는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무역의존도와 산업 연관성이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의 교역국으로, 대중수출 비중은 25.1%에 달해 세계 평균 10.4%보다 크게 높은 편인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 인구 13억의 거대 소비시장을 가진 중국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자국산 대체 노력으로 중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하던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음.
- 여기에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 전자부품과 스마트폰 등 첨단 제품에서 기술경쟁력까지 높여서 국내 시장에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년 사이에 중국은 한국과 기술격차를 1.9년에서 1.4년으로 0.5년 단축시킴.
- 또한 중국은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약세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 2014년 말 기준으로 이미 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는 품목도 1,538개로 우리나라 65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임. 이런 가운데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과의 FTA 체결이 수출에 기반한 한국경제에 미칠 긍정적 기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오히려 한국농업의 붕괴를 가속화시켜 식량자급 기반이 취약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소득주도 성장경제의 한계

- 경제위기와 함께 양극화가 확대되고 복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고용불안과 부채 증가가 결합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 결과 소비를 줄이면서 수요 위축이 일어나 저성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저금리와 저유가의 지속에 따른 구매력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가계의 소득 증가는 한계를 맞았고, 전·월세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짐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은 매우 낮아지고 있음.
- 여기에다 원화 약세로 달러 표시 일인당 국민소득도 하락하고 있음. 2014년 28,200달러에서 2015년 27,100달러, 2016년에는 27,000달러까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실제 경기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더욱 나쁜데, 특히 순자산과 소득이 적고, 자영업에다 가계수지가 적자이고, 연령은 높는데 노후준비가 부족할수록 체감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게 나타남. 여기에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노후가 불안정한 고령화 세대의 지출을 더욱 줄이도록 만들고 있음.

－ 노동투입 성장경제의 한계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시간을 투입해서 성장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 한계를 맞고 있음. 특히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부족에 따른 생산둔화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이 내년 0.2%로 낮아지고 내후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침체상황에서 고용증가의 대부분이 50대 이상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서비스업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고령화 추세에서 생산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활력을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상황임.
- 여기에다 기술의 발달과 경제구조의 변화로 성장과 고용의 상관성도 점점 약해지고 있음. 특히 미래세대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의 양적 투입에 기반한 경제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부채의존 성장경제의 한계

- 공공부문 부채 1000조 원, 기업부채 1300조 원, 가계부채 1200조 원 규모로 전 영역에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먼저, 공공부문 부채가 상환능력을 초과해서 계속 늘어남으로써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 국가부채가 2015년 595조1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645조2천억 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공공기관(316개) 부채는 2014년 말 기준 520.5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201.6% 수준
 - 공공기관 중 공기업(30개) 부채가 2014년 말 기준 377.1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72%를 차지. 특히 상위 7개 공기업²⁾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약 95%를 차지하

며, 부채 규모는 360.2조 원에 달함.

-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해결을 위해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저성장 시대에 악화되고 있는 서민경제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1년 사이 100조 원 넘게 늘어난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 원에 달해, 한국경제와 생활 전반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2005년부터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4.9%인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8.3%로 소득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더 빨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음.
 -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168%로 OECD 평균보다 30%포인트 높은 수준임. 여기에 사실상 가계부채인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시키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가계부채가 폭증한 데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이 미친 영향도 큼. 가계대출 75%가 주택담보 대출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미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약 112만 가구, 금액으로 143조 원 규모 수준임.
- 따라서 정부는 2016년 초부터 주택대출 제도를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함. 하지만 가뜩이나 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원리금 동시상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소비여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2016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 기간이 끝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할 주택담보 대출이 약 67조 원, 2017년에 갚아야 할 주택담보 대출은 44조3천억 원 수준임.
- 여기에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계속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취약한 부동산 시장이 받을 충격은 상당해서 하우스푸어(house poor)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음.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함.

생활양식의 변화 진단

- 경제적 양극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 경제적 양극화가 확대·심화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고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되어 내수경제의 침체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사회 최상위 계층 1%의 부가 전체 부의 18%를 차지함으로써, 계층 간 불평등 수준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 30대 그룹 상장사 임원 연봉이 직원의 평균 연봉의 10.8배 수준이며, 남녀간 임금차도 OECD 34개국 중 1위 수준.
 - 기업과 가계 간 소득불균형도 점점 확대되고 있음.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16.6%에서 23.3%로 더 높아짐.
 - 저성장기를 맞아 불확실성에 대비해 기업들이 저축률과 현금 자산비중을 계속 높임으로써 성장의 결과가 시민의 생활경제 영역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음.
- 빠른 고령화 추세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적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해서 2016년에 700만 명에 육박할 예정임. 고령화 속도는 농촌지역이 더 빨라서, 전체 평균 고령화를 12.7%의 약 2배가 되는 40%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세대의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음.
 - 한편,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상품 즉, 고령자가 먹기에 편리한 소포장 신선 제품이나, 유기농 건강도시락의 개발이 늘어나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편임.
-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소비행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경제적 어려움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청년세대의 미혼 증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세대 증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증가 등으로 1인 가구 즉 싱글족이 늘어나고 있음. 1인 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전체가구 대비 15.6%)에서 2015년 506만

가구(26.5%)로 급증하였고, 2035년에는 763만 가구(34.3%)에 달할 전망이다.

- 안정된 경제력을 갖춘 소수의 싱글(golden single)을 제외하고 다수의 1인 가구는 소득이 낮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우울한 산업예비군, 불안한 중년 독신자, 고령화에 따른 실버세대 등이 주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45.1%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 반조리식품 메뉴 다양화, 손쉬운 레시피, 소포장, 길거리 음식 등 새로운 경제영역(single economy)이 발달하고 있음.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이용률은 떨어지는 대신 인터넷/모바일 쇼핑몰과 편의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비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모두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 하는데,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유배우 가구 약 1200만 중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41.7%에 해당하는 약 503만 가구로 나타남.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15~64세)은 2000년 52.0%에서 2014년 57.0%로 계속 늘어왔으나, OECD 평균(62.6%)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 한편, 맞벌이 가구는 소비활동을 위한 시간 자체가 부족한데다 식료품비 지출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맞벌이 가구의 식료품 소비 비중(중산층 기준)은 13.4%로 비맞벌이 가구의 15.0%보다 낮게 나타남. 생애주기에서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40대와 50대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는데, 주중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외식이나 편의식품 구입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 불황기와 함께 맞벌이와 1인 가구, 고령화가 확대되면서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불황기에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주목받고 있는 쪽이 음식과 식품배달 분야임. 특히 식품관련 사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킨 푸드테크(food-tech) 사업 분야의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³⁾
 - 푸드테크 1.0 : 주문 중심(요기요, 배달의 민족, 배달통)
 - 푸드테크 2.0 : 주문 + 배달(자체 물류네트워크 구축)
 - 푸드테크 3.0 : 주문 + 배달 + 조리(반조리된 식품, 손질된 식재료, 레시피 제공)

3) 허건, 2015, 『대한민국 자영업 트렌드 2016』, 미래의 창 자료 참조.

- 외식의 간편성과 경제성을 집에서 즐기기를 원하는 세대의 등장으로 도시락, 가정 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반찬 시장과 식품배달서비스 영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특히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매출 약 16%의 고속성장을 해왔으며, 2014년 1조700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약 3조 원 시장으로 급성장함. 향후 성장 전망도 높아 대상·풀무원·오뚜기·CJ제일제당 같은 대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와 편의점들도 간편식 PB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음.
 - 롯데마트: 2015년 말 가정간편식 브랜드 '요리하다'를 출시. 채소를 다듬거나 볶는 등 간단하지만 별도의 요리과정이 필요한 반조리 상품인 RTC(Ready To Cook)⁴⁾ 비중을 늘려 차별화를 시도. 식생활 해결책을 제안하는 밀 솔루션(Meal Solution)을 브랜드 특징으로 해서 완제품 위주의 먹거리가 아닌 반조리 형태의 먹거리를 통해 '요리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전략임. '요리하다' 제품을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 판매하고, 세븐일레븐에서도 1인 가구에 맞춘 소량화 작업을 거쳐 출시할 예정임.
 - 이마트: 지난 2013년 1월 자체 개발한 가정간편식 브랜드 '피코크'(Peacock)를 출시해 HMR 매출이 2013년 4.7%에서 2014년 9.4%, 2015년 11.5%로 증가해 옴.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둔 기존 PB 상품들과 달리 이마트는 가격보다 맛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선택함. 이마트의 피코크 매출액은 14년 800억 원에서 15년에 2,500억 원, 16년에는 3,000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 '피코크'로 HMR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신세계푸드는 2014년~2015년 8월까지 총 700억 원(음성 2공장 및 기타)을 투자해 HMR 제품(탕, 면, 소스 등 40여 개)을 생산할 시설을 조성함.
 - 홈플러스: 최근 가정간편식 브랜드 '싱글즈 프라이드'를 론칭하고 냉동 간편식 14종을 출시함.
- 가정간편식은 음식을 완성 직전 단계까지 조리해 판매하는 제품으로, 데우거나 끓이는 단순한 과정을 더해서 양질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과거 간편식이 '한 끼 때우기' 인스턴트식품 이미지가 있었으나, 제조와 포장기술 발달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으로 '편리'와 '건강', '맛'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음.
-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야외활동 인구 증가, 온라

4) 가정간편식은 조리 수준에 따라 크게 3가지 즉, 반찬, 샌드위치, 김밥, 샐러드 등 바로 식사가 가능한 'RTE(Ready To Eat) 상품',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RTH(Ready To Heat) 상품', 재료와 소스가 함께 포함된 찌개, 탕류 등 간단 조리를 해서 먹는 'RTC(Ready To Cook) 상품'이 있음.

인과 모바일 이용 확대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1인 가구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간편식 구매빈도가 증가하는데, 여기에다 최근 소위 ‘떡방’, ‘쿡방’, ‘셰프 열풍’으로 ‘집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집에서 간단 요리로 양질의 외식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에 영향을 줌.

- 가정간편식은 초기 라면에서 3분요리 레토르트 식품으로, 최근에는 국, 밥, 찌개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옴. 요즘은 스타셰프나 유명식당 등과 협업한 ‘제대로 된 한끼’로서 간편식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 최근에는 ‘산지직송 정육점’, ‘친환경 식재료 매대’, ‘셰프도우미 조리식당’ 등을 One-Step Food Shop으로 묶은 신개념 HMR 프랜차이즈 브랜드 ‘1466 요리하는 푸줏간’ 까지 등장하고 있음.

– 경기불황과 유통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활밀착형 편의점이 급성장하고 있다.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이 1~2인 가구 증가, 모바일·온라인 시장 확대 등에 따른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체 또는 침체 상황을 맞고 있음. 국내 대형마트 매출 실적은 2012년 -3.5%, 2013년 -8.5%, 2014년 -11.2%를 기록했으며, 2015년 3분기(7~9월)에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함. 백화점 역시 2년째 정체상태임.
- 이런 가운데 생활밀착형인 편의점이 과거 대형할인점이 차지했던 중저가 생필품 소비시장 영역을 빠르게 차지하고 있음.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위드미FS(위드미) 등 주요 4개 편의점 업체는 2015년 3분기까지 매출 9조1654억 원, 영업이익 343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9.3%, 영업이익은 66.5% 늘어남. 2016년에도 국내 편의점 시장은 7%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편의점은 경기침체와 함께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소량구매 패턴이 확산되는 가운데,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PB상품 개발, 배달 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음. 2015년에 2400여 개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어 전체 점포수가 2만6000개를 넘어섬. 앞으로도 퇴직자의 창업과 기존 구멍가게의 편의점로의 전환 등으로 출점 수가 연간 3~5%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편의점 업계의 성장에는 1인 가구 증가 등에 힘입어 도시락 매출이 커다란 영향을 줌.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편의점 도시락 판매량은 GS25 44%, 세븐일

레븐 71%, CU 41% 성장함. 김혜자, 백종원, 헤리 도시락 등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 편의점 도시락을 구입하는 데는 내용물 함량이나 영양보다는 맛과 가격, 위생, 유통기한 등을 주요하게 들고 있음.

- 모바일 발달에 따른 유통체계 혁명이 생활물류 서비스의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백화점 등 전통적인 유통채널이 위기를 겪는 가운데 온라인 유통채널이 강세를 보 이면서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 지역 생활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 비스들(배달, 수리, 세탁, 청소, 숙소 공유 등)을 스마트폰 앱으로 중개하는 O2O(Online-to-Offline) 서비스가 점차 확산되면서,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 O2O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활동 영역을 ‘신선식품’에서 ‘공산품’으로, 나아가 ‘생활서비 스 영역’(이사, 세탁, 청소, 돌봄 등)까지 확장해가고 있음.
- 모바일은 이동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매우 높고, 메뉴 검색, 주문, 결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다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 혜택이 있고, 이용후기나 평점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장점이 많아 발전 속 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주요 포털은 이런 특성을 활용 해 농산물 시장에도 참여하고 있음.
- 주요 유통업체들은 결제 수단의 ‘간편화’를 통해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하고 있음.
 - 신세계: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를 제공. SSG페이의 핵심 기능인 SSG머니는 e-머니 개념으로 무통장입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충전이 가능함. 특히 각종 멤버십 포인트를 SSG머니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 롯데: ‘엘페이’의 결제 서비스를 기존 롯데카드 중심에서 신한카드, KB카드, 삼성카드, 현대 카드, BC카드 등으로 확대.
 - 현대백화점: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한 ‘온터치’ 기술을 적용해 휴대폰을 결제 단 말기에 올려놓으면 앱이 자동 실행돼 결제가 되도록 함.
 - 쿠팡: ‘지문’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
- 한편, 최근 유통업계는 모바일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근거리 기반 생활물류 서비 스 체계를 적극 강화해가고 있음.
 - 쿠팡: 1,500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 14곳을 마련하고 9,800원 이상 물건을 주문하면 자체인

력 쿠팡맨이 24시간 안에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

- 편의점 CU: 배달 대행업체인 '부탁해'와 제휴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40분 내 물건 배달(배달비는 1500~3000원 수준)하는 서비스를 제공.
- 롯데슈퍼: 2014년 말부터 2015년 말까지 '서초센터', '상계센터', '장안센터'를 열어 서울 권역에 3시간 내 구매 물품을 배송을 하는 체계를 갖추. '서초센터' 오픈 후 롯데슈퍼 주문량은 50%, 매출은 60% 이상 상승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서부권과 경기 주요 도시로 '3시간 배송'을 확대할 계획.
- 신세계백화점: 2015년 11월 오토바이 퀵배송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SSG닷컴에서 백화점 본점 상품을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결제하면 주문 후 최대 4시간 이내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
- 홈플러스: 온라인 주문 후 4천 원을 내면 오토바이로 1시간 내에 상품을 배달하는 퀵배송을 서울 지역에서 시행중. 수도권과 광역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성공적일 경우 중·소도시로 확장할 계획임.

-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태가 늘어나면서 국내경제에 새로운 영향을 주고 있다.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해외제품을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된 데는, 원하는 해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해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임. 여기에는 배송 기간 단축, 포인트 적립, 결제절차 간소화 등 관련 업계의 시스템 개선 노력도 작용함.
- 우리나라 해외직구 규모는 2010년 2.7억 달러에서 2014년 15.5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해외직구 건수도 같은 기간 약 358만 건에서 1,553만 건으로 증가함.
- IT 기반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흐름이 저성장기 민간소비 영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행태가 확산될 경우 국내 관련분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
- 해외직구 품목이 의류에서 전자제품, 화장품, 먹거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식품, 곡물,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직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국내 관련 품목의 농업과 먹거리 영역에 미칠 영향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협동경제 영역의 현황과 과제

-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과 자립 측면에서 해결 과제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

-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⁵⁾ 2015년 말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인가 받은 조합이 8,562개로 나타남. 설립인가 조합 중 일반협동조합은 8,110곳,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44곳, 사회적협동조합 404곳,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곳으로 확인.
- 2014년 말 기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신고수리·인가된 6,235개 협동조합 중 5,325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5.5%에 해당하는 2,957개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92.1%가 일반협동조합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7.3%임.
- 총 조합원 수는 106,020명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47.3명, 협동조합 종사자는 조합당 평균 13.2명으로 확인. 협동조합 직원 월 평균 급여는 정규직 143만원, 비정규직 98만원 수준이고,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81.9%.
- 설립인가를 받고도 사업 운영을 앓는 이유로는, 사업모델 미비(27.2%), 충분한 조합원 수 미확보(14.6%), 사업운영자금 부족(14.3%), 사업준비 중(12.9%) 순으로 답함.

-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동조합의 의미 있는 실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 학교협동조합: 2013년 서울 영림중학교를 시작으로 학교협동조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2014년 고양 덕이고, 의정부여중 등 5개교, 2015년 서울 삼각산고, 경북 문경여고 등 7개교로 지금까지 15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됨.
 - 학교협동조합은 '매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문경여고 경우 교복 공동구매 및 대여, 장학, 문화, 나눔 등으로 사업 분야를 넓혀갈 계획을 밝히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동 영역이 점점 확장 추세에 있음.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문화, 여행, 학습 등을 주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증가 추세와 맞물려 학교밖 협동조합과 사업 제휴 가능성도 예상됨.

5) 기획재정부,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5. 12. 31.

-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전남도, 제주도, 대전 유성, 경기 안산, 충남 아산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설립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택시협동조합: '쿵 택시'가 서울 지역에서 시작되어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서도 추진 계획에 있는 등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사회서비스협동조합: 방과후 나홀로 아동 돌봄, 독거노인 병원진료 동행, 장보기 대행, 영유아 일시 돌봄 등 사회서비스 관련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6개 세차 자활기업이 연합해 만든 워시마스터 협동조합(서울),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차 서비스 '친환경 카 크리닝' 사회적협동조합(충남 아산) 등
 -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협동조합 운영모델로 사회서비스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주택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임. 2015년 기준 국내 주택협동조합은 30여 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으나 구름정원사람들, 오시리가름협동조합과 같이 거주자들이 협동조합을 이루는 경우보다는 주택 건축, 분양, 임대, 관리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다수임.
 - 후자는 저소득층과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 빈집 살리기, 주택 관리, 주택 신축 코디네이팅 등의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과 공동체 주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며 주택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참여 자격을 부여해 민간 협동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SH공사는 청년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장 인근 협동조합과 연계해 마을공방을 운영하는 등 협동조합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거 복지에 주목하고 있음.

－ 불안정한 생활경제와 높아진 주거 불안으로 공동체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저성장, 양극화, 가계부채 심화로 생활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전세난과 전세가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공동체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 공동체주택은 비용절감과 이웃 간 소통과 공간 공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 공동체주택은 공동육아 학부모나 동호회, 가족 등 지인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하우징쿱협동조합에서 건설한 구름정원사람들이나, 부산의 일오집처럼 전혀 모르는 사이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투자해서 집을 짓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공동체주택 설립을 돕는 역할을 하는 (주)소행주, 하우징쿱협동조합 같은 단체도 나타나고 있음. 이들은 공동체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받고 설계에서 시공, 등기까지 집 짓는 일련의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함. 집을 짓고 함께 살 사람들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함. 서울시도 공동체주택 지원을 위해 공공 토지 임대, 정보 제공, 자금대출 및 서비스 등의 지원 활동을 확대할 방침임.
- 한편,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대출 요건 강화로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 주택에 다가가기란 여전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공동체주택을 지은 사례들도 협동조합 방식보다 자발적 협약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여기에는 현재 제도가 협동조합을 지원하기보다 오히려 법인세 납부, 총회결과 보고, 경영 공시(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 법적 의무 사항이 많아 부담을 주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음.

수입 농산물과 농지 파괴로부터 농업을 지켜내는 노력이 중요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⁶⁾

-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으로서 농업·농촌이 담당해 온 역할에 대해 농업인(86.9%)과 도시민(88.4%) 모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 한편, 농업·농촌의 발전 정도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농민들보다 도시민들이 약 2배가량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을 가진 도시민이 47%로 전년보다 8% 증가했는데, 주로 생계보다 건강과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 이유로 들고 있음. 이것은 귀농보다 귀촌을 원하는 비중이 3배 정도 더 높은 것과도 연결됨.
- 그런데 도시민 38.6%가 수입농산물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함. 그 다음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한다는 응답자가 25.7%, 수입농산물을 좋지 않게 생각해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5.2% 순으로 나타남.
- 국적을 불문하고 품질 우수성을 고려해서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고, 우리 농산물이 수입품보다 비싸면 수입품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39.7%, 가격이 비싸더라도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21% 순으로 나타남. 이처럼 가격이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충성도는 2009년 37%에서 2015년에는 21%로 계속 하락하고 있음.
- 문제는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소득 악화와 함께 생활 경제가 위축될수록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텐데, FTA, TPP 가입 등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을 확대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농산물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6) 김동원·박혜진, 2015, <농업·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참조.

국내 식량자급 기반은 무너질 수 있음.

－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대거 해제하여 우량농지가 감소될 경우 식량자급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 2015년 12월 16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전체 농업진흥지역 100만ha 중 10%에 해당하는 약 10만ha를 선별적으로 해제·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한 지역’으로, 1992년에 시작되었으며, 농지법 제32조에 의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런 규제의 배경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식량자급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농지를 개량해 조성된 만큼 공공적 성격이 높다는 점도 작용하였음.
-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가격 대비 기반시설과 접근성이 우수해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도 높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계속 있어 왔음.
-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량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대량의 해제 및 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6월 말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구체적인 해제 및 전환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 기본 내용은 도로·철도 개설이나 주변 개발, 또는 지정 목적이나 기능의 변화 등으로 본래의 가치가 약화된 일정 규모 이하 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과 건축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됨.
 -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으로 이미 설치된 가공, 처리 등 제조시설의 용도 변경이 어려웠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제조시설의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해짐.
 - 농산어촌체험시설 설치자 범위를 기존 마을공동에서 개별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도 가능하도록 확대.
 - 국내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취급범위를 농산물에서 농림축수산물까지 확대.
- 정부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곳에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 승마시설, 야영장, 체험·관광시설 설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조치로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정부도 투기 차단 대책을 고민하고 있음.

-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조치로 대량의 우량농지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시켜 결국 국내 식량자급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지 전용과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여 농지가격을 인상시키고, 이것이 결국 임차농과 귀농인들의 농지 구입 및 활용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고 있음.
- 결국 세계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로 생존환경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의 자급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만큼, 우량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이용과 개발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나아가 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 이 중에서도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 조성된 친환경 농지를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가속화시킬 TPP 가입에 대한 우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TPP가 관련국들의 협상타결로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작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가 12개국 각료회의에서 잠정 합의를 통해 TPP 협상타결을 공식 선언하였고, 올 상반기에 전체 회의를 열어 협정문에 정식서명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정식서명 후 참가 12개국들은 각자 국내 비준절차를 밟게 되고, 2017년 초에 TPP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만 현재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이 TPP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올 11월 미국 대선이 TPP 추진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TP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회원국 간에 상품 및 서비스의 관세 및 규제 철폐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말함. TPP에 참여하는 12개 참가국 규모를 세계전체와 비교해 보면, 인구는 11%, GDP는 37.1%,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할 만큼 상당한 수준임.
-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임에도 양자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

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TPP가 자유무역협정을 표방하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따라서 TPP 타결 후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속도를 내고 있음.

- 현 상태로 TPP가 발표될 경우 특히 관세 인하 효과를 보는 일본이 기술경쟁력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한국의 수출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협정문이 공개된 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함. 하지만 우리가 가입할 경우 기존 12개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소위 가입료 지불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는데다, 개방 폭이 커서 우리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만큼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큼.

-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시 특히 농업과 먹거리 분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당사국간 협상과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FTA와 달리, TPP는 예외 없는 관세철폐로 농산물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가져옴. 그동안 농업의 특성과 각국 입장을 고려해 무역에서 농산물을 예외로 다루어 온 기조들이 있었으나 TPP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짐.
- 현재 TPP 참여국 가운데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등 농산물 수출국이거나 식량자급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현재 농산물 시장개방 수준이 가장 높은 한미 FTA보다 TPP 가입이 한국 농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한국이 TPP에 가입할 시 쌀 시장 개방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기존 가입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등 쌀 수출 국가들이 한국의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또한 TPP 협정 내용에 원산지 규정 완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철회, GMO 확대 허용 등이 포함되어 먹거리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TPP와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짐. TPP 협정문에는 이런 긴급조치를 6개월 이내에 과학적 근거를 심사해서 그 결과를 상대국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TPP는 식품기업에 ‘필요 이상으로’ 식품 첨가물 표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GMO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음.

- 문제는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FTA 추진 과정에서 보여주었듯 충분한 여론 수렴과 대책마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임. 정부와 여당이 올 4월 총선 이후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TPP 가입을 서두르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공권력으로 억누를 가능성이 큼. 따라서 도시 소비자들과 생산자 농민들이 힘을 모아 농업과 먹거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함께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함.

GMO의 확산 우려와 위해성 논란⁷⁾

- 최근 들어서 GMO 작물 재배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재배하는 곳은 28개국으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 북남미 7개국과 아시아의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공 등 10개국이 해당됨. 옥수수, 콩, 카놀라(유채), 면화, 사탕무 등 세계 GMO 농산물 생산량의 87%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북남미 4개 국가가 생산하며, 아시아가 11%, 아프리카가 2%를 생산하고 있음.
- 한편, GMO 재배를 공식적으로 금지한 곳은 38개국으로, EU 28개국, 아프리카 2, 아시아 4, 남미 4곳임. EU는 지난 10년간 GMO 작물재배 허용문제로 회원국(28개국)간 치열한 논쟁을 해왔으며, 2015년 6월 12일 10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회원국들 스스로 자국 내 GMO 재배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함. 2015년 10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중 15개국이 몬산토 등 GMO 기업들이 불필요하고 해가 되는 GMO 작물들로 자국의 농업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내 GMO 작물재배를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함.

- GMO의 위해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 정부는 GMO 수입을 확대하고 나아가 GMO 작물 재배까지 서두르고 있다.

7) 작성: 김훈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 우리나라는 그동안 GMO 재배는 금지하되 수입을 허용해 왔음.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2위 GMO 수입 국가로, 식용 GMO 수입량은 세계 1위임. 2014년 기준 식용 콩의 경우 전체 수입 콩에서 GMO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달하며, 식용 옥수수 경우 전체 수입 옥수수 가운데 61%가 GMO이고, 사료용 옥수수는 99.9%가 GMO임.
- 199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GMO 수입국으로서 매년 수입량을 확대해 왔음.

〈표 1〉 국내 주요 농산물 GMO 수입 현황 (단위: 천톤)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물량	비율 (%)	물량	비율 (%)	물량	비율 (%)	물량	비율 (%)	물량	비율 (%)	물량	비율 (%)	물량	비율 (%)
콩	식용	GMO	923	77	848	76	922	80	801	71	882	74	729	65	1,021	80
		일반	281	23	275	24	225	20	324	29	318	26	388	35	258	20
		소계	1,204	-	1,123	-	1,147	-	1,125	-	1,200	-	1,117	-	1,279	-
옥수수	식용	GMO	732	52	334	23	993	46.2	969	49	1,034	49	918	48	1,262	61
		일반	680	48	1,114	77	1,156	53.8	1,011	51	1,078	51	985	52	805	39
		소계	1,412	-	1,448	-	2,149	-	1,980	-	2,112	-	1,903	-	2,067	-
	사료용	GMO	7,047	94	5,830	92	6,451	98.2	5,847	94	5,779	95	6,820	100	8,469	99.9
		일반	422	6	529	8	115	1.8	345	6	295	5	-	-	6	0.1
		소계	7,469	-	6,359	-	6,566	-	6,192	-	6,074	-	6,820	-	8,475	-

(출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수입 GMO는 대부분 가공식품에 사용돼 왔음. 옥수수는 전분과 전분당으로 만든 온갖 가공식품에 섞여 있으며, 콩은 99% 정도가 콩기름 제조에 쓰인다고 알려짐. 문제는 국산 GMO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 한국인의 주요 식재료에 해당되며, 향후 국산 GMO의 승인이 모두 이뤄진다면 한국인 식단 전체가 GMO로 바뀔 전망이다.
- 그런데, 여기에다 2015년 9월 8일에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사업단’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최된 ‘16차 LMO 포럼 세미나’에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다양한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현황을 소개하면서 GMO 작물 재배 국가를 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힘.
- 최근까지 국내에서 개발돼온 GMO는 20여 개 작물 200여 종에 달하며, 현재 자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마친 종류는 벼 2종(가뭄에 잘 견디는 벼, 레스베라트를 생산 벼), 고추 1종(바이러스에 잘 견디는 고추), 잔디 1종(제초제에 잘 견디는 잔디) 등 4종임.

- 농진청 사업단에 따르면 레스베라트롤 생산 벼와 바이러스에 잘 견디는 고추 등 2종을 대상으로 정식 승인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르면 2016년 7월 승인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식용 GMO가 재배되기 시작함.
- 이번 승인절차에 들어서는 벼에는 땅콩이나 포도에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삽입되었는데, 식물이 병원체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은 최근 과학계에서 심장질환 예방, 지방간 발생 억제, 비만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가진 벼는 한 국민은 물론 아시아인들의 주곡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번에 사업단은 레스베라트롤 벼를 식용이 아닌 ‘산업소재용’으로 개발한다고 밝힘. 레스베라트롤이 가진 또 다른 기능인 미백 기능을 활용해 화장품 재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주곡인 쌀을 GMO로 바꾸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결과로 보임.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조치로 여론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식용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임.

〈표 2〉 최근 국내에서 개발돼온 GM 벼의 종류와 시험재배 지역

연도	특성	안전성평가 지역(기관명)
2010	해충저항성 벼	수원(국립농업과학원), 밀양(국립식량과학원), 군위(경북대)
	비타민 A 강화 벼	수원(농과원), 군위(경북대)
	제초제저항성 벼	밀양(식량원)
2011	레스베라트롤 생합성 벼	수원, 익산, 밀양(식량원), 군위(경북대)
	해충저항성 벼	수원(농과원), 군위(경북대)
	비타민 A 강화 벼	수원(농과원), 군위(경북대)
	제초제저항성 벼	밀양(식량원)
	가뭄저항성 벼	수원(농과원, 식량원), 군위(경북대)
2012	레스베라트롤 생합성 벼	수원, 익산, 밀양(식량원), 군위(경북대)
	가뭄저항성 벼	수원(농과원, 식량원), 군위(경북대)
	제초제저항성 벼	밀양(식량원)
	병저항성 벼	수원(농과원), 군위(경북대)
2013	레스베라트롤 생합성 벼	수원(농과원, 식량원), 익산, 밀양(식량원), 군위(경북대)
	가뭄저항성 벼	수원(농과원, 식량원), 군위(경북대)
2014	레스베라트롤 생합성 벼	수원, 익산, 밀양(식량원), 군위(경북대)
	가뭄저항성 벼	수원(식량원), 군위(경북대)
2015	레스베라트롤 생합성 벼	전주, 수원, 밀양(식량원)
	가뭄저항성 벼	전주(농과원), 군위(경북대)

(출처: 농촌진흥청)

- 한편, 신체에서 비타민 A를 형성하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고추에서 얻어 벼에 삽입한 ‘비타민A 강화 벼’, 일명 황금쌀(golden rice)이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조만간 상업화될 전망이어서 국내에서도 서둘러 승인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이 외에도 현재 항충성 GM 벼가 개발되고 있고, 벼 외에 이번에 신청이 이뤄질 고추를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돼온 대부분의 GMO가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GMO가 인체와 환경의 건강을 위협하고 재배 농가의 생존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GMO 수입국 입장에서 GMO에 대한 논란들을 다루어 왔는데, 향후 GMO 재배국 위치가 될 경우 논란의 성격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인체 위해성 문제〉

- GMO의 인체 위해성 논란은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과학계에서 꾸준히 있어 왔음. 특히 2012년 프랑스 세라리니 교수 연구진의 논문은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음. 기존의 GMO 안전성 실험 가운데 생쥐 섭취 실험은 3개월 정도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생쥐의 전 생애인 2년간 GMO를 먹여본 결과, 면역기능 이상, 종양 발생, 수명 단축 등의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해 발표하였음. 당시 이 논문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당 학술지에서 철회됐지만, 다른 학술지에서 그대로 게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음. 2014년 11월에는 러시아, 미국, 유럽 등의 과학자들이 모여 일명 ‘팩터(factor) GMO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생쥐의 전 생애에 걸쳐 다섯 세대까지 관찰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음.
- GMO 콩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아르헨티나의 산골 차코 지역의 실태를 작년 9월 20일 방송에서 "차코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되었는데, 여기서 얼굴과 온몸 곳곳에 검은 반점과 검은 털로 뒤덮여 고통 받는 '아이샤 카노'라는 어린 소녀를 비롯해, 수많은 차코 지방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중증장애와 각종 이상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장면들이 소개되어 충격을 주었음. 이런 참상의 원인은 몬산토 사의 라운드업 레디(RR) 콩 GMO 종자를 심으면서 해마다 제초제·농약에 내성이 강화된

슈퍼 잡초와 슈퍼 곤충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더 강하고 많은 양의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을 살포하면서 땅과 강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환경 위해성 문제〉

- GMO의 환경 위해성 문제는 이미 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GMO 곡물을 수입해 운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GMO가 이미 국내 곳곳에서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유출된 GMO 종류는 국내에서 심사를 거쳐 수입이 승인된 콩, 옥수수, 면화, 유채(캐놀라) 등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권(21곳), 충청권(9곳), 전라권(8곳), 강원권(7곳), 경상권(4곳) 등에서 발견되었으며, 지난해에는 29개 지역에서 발견됨.
- 그런데 만약 국내에서 GMO가 재배될 경우 유기농가를 비롯한 인근 농가에 GMO가 전파돼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유기농가에서 GMO가 발견되면 당연히 유기농 인증이 취소될 수밖에 없음.
- GMO가 다른 경작지에 침투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많이 발견됨. 미국에서 유기농을 많이 재배하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17개 주의 농부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GMO로 인한 오염 가능성을 걱정했으며, 60%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자신의 농지에서 GMO를 발견했거나 그 존재가 의심된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구매자로부터 농산물 판매를 거부당한 적이 있었음.
-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농약 사용량이 GMO 재배 농가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임.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GMO 작물을 재배하면 농약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09년 미국 유기농센터의 찰스 벤브룩 박사는 미국에서 GMO의 상업적 재배가 시작된 1996년부터 13년간 제초제 사용량이 3억8,260만 파운드 정도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기존의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잡초 때문이라는 것임.

〈농업 경제성 악화〉

- 최근에는 GMO를 재배하는 농업 생산자의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는 상황임. 비싼 GM 종자 가격, 농약 사용량 증가 등으로 농가에서 실제로 얻는 이익이 기존

에 비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임. 미국에서 GM 종자의 가격은 일반 종자보다 1.5배 비싸지만 파종을 할 때마다 새로 종자를 구매해야 함. 농가에서 GMO를 재배할 경우 자가채종을 금지하는 것도 비용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한 보고서에서는 GM 종자의 가격 상승 효과가 수확량 증대나 농약구입비 감소 효과보다 더 커서 GMO 재배 농가가 일반 농산물, 심지어 유기농산물을 경작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밝힘.

- GMO 문제가 가진 특성을 사회적으로 잘 인식해서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GMO 문제는 농업과 먹거리, 생산자 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의 공동의 과제임. GMO는 통제 불가능한 기술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 GMO 농작물이 실험실 밖으로 나와 재배될 경우 생태계 전체로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현재의 기술로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GMO 작물의 화분이 바람에 날려 우리나라 농지 전체를 순식간에 오염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GMO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개발되는 만큼,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강대국과 초국적 농업생명공학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고, 농업생산의 결과 또한 농민이 아닌 GMO 산업체로 돌아가 결국 식량주권과 종자주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GMO는 사전예방적 접근이 특히 필요한 영역인데, 우리 정부는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GMO 작물 재배와 관련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저농약 인증 중단과 함께 2016년부터 GAP농산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GAP는 농약은 물론 제초제와 GMO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고 있음.
-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한국 농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전망이다. TPP가 체결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농업 수출국의 GMO 수입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임. 일찍이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내 유기농식품의 GMO규제 완화를 한국의 TPP가입을 위한 선결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으며, TPP 내용에도 유전자변형식품(GMO) 보호 규정을 두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결국, 가농과 생협 등 민간 차원에서 우리 밀, 우리 콩, 우리 보리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경험을 살려서, 뜻있는 농민과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정부의 GMO 농작물 상용화 시도와 GMO 식품의 수입 확대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단체들의 non-GMO 표시제 도입 및 확대를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생산자들과 힘을 모아 GMO free zone을 늘리는 노력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부가 GMO 연구개발에 쏟아 붓고 있는 세금을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귀농귀촌 지원 법률의 제정 의미와 과제⁸⁾

- 정부는 귀농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5년 1월 20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지원법)이 제정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됨.
- 귀농·귀촌인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이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법 시행령 제2조)으로 정의.
-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실태조사 설계 용역(2015년 11월~2016년 11월)’을 진행하고 있고, 2016년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련 표준조례를 제시함으로써, 2017년부터 종합계획을 시행할 계획임.
- 또한 2014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연구위탁을 받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귀농·귀촌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5개년)’를 진행 중에 있음.

8) 작성: 최용재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귀농지원법에 있는 추진 체계를 보완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합계획을, 시·도 및 시·군은 지원계획을 ‘임의계획’이 아닌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5조 및 6조).
- 다만, 국가나 시·도 차원에서 귀농·귀촌 계획의 수립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없이 시·군에서 반드시 5년 단위 지원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계획 수립 시 농촌컨설팅 업체들의 관행적 보고서화가 우려되므로 지원계획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임의계획’화 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지자체들이 귀농·귀촌 협의회 및 위원회 등을 조례상 명기하고 있지만, 귀농 지원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고, 단지 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항목만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군수의 개인적 의지에 따라 귀농·귀촌 정책이 결정·시행되지 않도록 거버넌스 조직인 귀농·귀촌협의회 설치를 통해 귀농·귀촌관련 제도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원적 시스템이 요구됨.
- 또한 지원 관련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 귀농·귀촌인들, 특히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농촌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귀농운동본부에서 TFT를 통해 모범조례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생산자 중 귀농인들이 많은 한살림의 경우 생산공동체가 속한 각 지역 시·군에 모범조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 이는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한살림 조합원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임.

공멸을 향한 갈등에서 평화를 통한 공존으로

-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경쟁을 확대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 동북아 지역은 군사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결되어 있어 긴장과 충돌 가능성 또한 높은 곳임. 세계 1위 군사력의 미국 군대가 동북아 지역 여러 곳에 배치된 데다, 러시아(2위), 중국(3위), 한국(9위), 일본(10위) 등 10위권 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포진하고 있음. 여기에도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존재 또한 위협적임.
- 근래에 중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 확장에 앞장서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일본 아베 정권은 이런 흐름을 이용해 군사 재무장과 함께 급격한 우경화 노선을 걷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군사 영역을 넘어 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가운데,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 경쟁도 가열되고 있음. 이처럼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적 경쟁 확대는 동북아 지역 전반에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남북한 간 대립 구조는 국방비의 과잉 지출에 따른 자원 이용의 왜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국가 재원의 상당부분을 군사비 지출에 사용토록 만들고 있음. 작년 말 미국 의회 조사국은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나라로 발표함. 2014년에 무기 구입에 쓴 돈은 78억 달러(한화 약 9조1300억 원)로, 이 중 90%가 미국산 무기여서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의 상당액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비는 해마다 늘어나 2016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액된 약 38조8천억 원 규모로, 국가 전체 예산의 약 10%를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음. 문제는 성장경제의 한계 속에 국가 총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양극화 확대와 일자리 악화, 취약한 복지 기반 등으로 갈수록 팍팍해지는 시민들 살림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국방비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임. 국방부는 국방관련 각종 비리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서 2016~2020년까지 5년 동안 필요한 국방비를 232조5천억 원으로 잡고 있음. 이는 연 평균 7%씩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것을 말함. 북한 역시 인민들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 총예산의 약 16%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음.
- 결국 같은 민족이면서도 70년간 분단 된 채 서로 다른 이념으로 대치해 온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남북한 모두로 하여금 군사비의 과잉 지출에 따른 경제·사회적 자원의 왜곡된 이용을 불러오고, 나아가 이념대립과 소모적 갈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상상력과 에너지를 차단하고 소진시키는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음.

－ 평화적 공존을 위해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 동북아 지역의 중심 위치에 있는 한중일 3국은 역사·문화적 공통점이 많고,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으며, 한중일 3국의 인구가 15억인데다 경제적 상호 관련성과 의존성 또한 높아 상호 협력을 통한 긍정적 기대효과가 매우 높음.
- 하지만 동시에 한중일 간에는 정치체제의 성격과 이념적 이질성이 여전히 높고,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분쟁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듯이, 갈등요소 또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음. 특히 중국은 자신이 지배하는 중화권을 재창출하려하고 있고, 일본은 자신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재건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 강대국들이 서로 다른 꿈을 향해 힘으로 경쟁하고 있음.
- 문제는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지금까지처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면서 소모적인 경쟁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경우 공존공생을 통한 상호발전의 기회를 놓친 채 공멸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현재 북한은 당 중심의 국가권력을 강화와 인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동시에 추구

하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지금 북한 경제는 자본 및 기술의 부족과 설비 노후화,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의 미비, 원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자력 회생이 쉽지 않아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체제유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개방과 외자유치는 어려운 전망이다.

-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돌발 강행해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긴장이 고조되어 오던 남북관계가 작년 남북고위급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대화와 교류·협력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으나,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기습 강행하면서 남북관계는 안개 속에 빠져들게 됨.
- 하지만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집권 5년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인민들의 경제생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대선을 앞둔 미국 역시 북미 관계의 성과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뿐만 아니라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역시 임기 1년을 앞두고 남북 관계에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4월 총선 이후 남북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음.
- 문제는 남북관계의 변화가 선거정치의 윤희리와 같은 기득권 집단의 정략적 판단으로 진행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왔던 만큼, 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상호 신뢰와 평화적 공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때임.
- 하지만 올 4월 총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은 기성 정당들의 분열과 이합집산 속에서 시계 제로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이고 있음. 문제는 현 상태로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2/3 이상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선거후 국가부채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과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내년 대선까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기득권 집단과 제도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때임.

파리 기후변화 총회 결과와 의미⁹⁾

-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느슨한 수준의 합의 프레임 속에서 치러졌다.

-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UNFCCC COP21)가 2015년 11월말부터 2주간 파리에서 개최됨. 이번 기후변화 총회는 회의 개최지 파리에서 회의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최악의 테러가 발생해 비상사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150여 국가 정상이 참가하는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회의였음.
- 불투명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기후변화 총회는 사전에 합의의 프레임이 거의 짜여 있어 타결 전망도 높았음.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COP15에서 한번 좌초한 적이 있어, 이번 파리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체제 수립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하고 있었음.
- 파리 기후변화 총회의 합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는, 선진국들이 새 기후체제 출범의 실패가 반복될 것에 따를 비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데다, 이번부터 국가별 자발적 감축 목표(INDCs)라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실제 각국의 온실 기체 감축 의무가 느슨해졌던 점도 작용하였음. 가장 큰 두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코펜하겐 회의 이후 당사국총회를 사실상 좌우해 온 미국과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뀐 데도 이런 변화가 영향을 주었음.
- 선진국들에게만 강제적 감축 목표를 할당한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이번에 바뀐 방식으로 인해 90%에 가까운 국가들이 자발적 감축 목표(INDCs)에 동참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 그러나 각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를 모두 합하면 금세기 말까지 평균 기온이 2.7도에서 3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와 집단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전향적인 문구가 담겨 있는 파리 합의문, 그러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방법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 예정 시간을 하루 넘겨 12월 12일 발표된 파리 합의(Paris Agreement)는 교토의정서 체제(2008-2012년) 이후의 공백 상태를 해결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9) 작성: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파리 합의문의 전문(preamble)에는 식량 안보, 정의로운 전환, 괜찮은 일자리, 인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원주민·공동체·이주민·아동의 권리, 발전권, 젠더 평등, 세대 간 형평성, 어머니 지구, 기후정의 등 과거에 찾아볼 수 없던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앞으로 파리 합의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보다 각국의 기후 정책과 국제적 지원을 전향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이 실제 합의 본문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구속성이 결여된 문제를 피하기 위한 미사여구라는 지적도 있음. 실제로 합의된 본문에서는 초안에 존재했던 감축 연도와 감축량 목표가 사라졌고, ‘탈탄소(decarbonization)’가 금세기 말까지 ‘순배출량 제로(net zero)’라는 표현으로 대체됨. 이는 상쇄기술이나 탄소시장의 역할을 함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화석 연료 종말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다만, 산업화 이전에 비해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2°C) 유지하고 1.5도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는 온도 목표 설정은 기후 취약국들의 요구를 반영한 성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자발적 감축목표 방식 하에서 이것이 선언적 의미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즉 구체적인 실현가능성과 방법은 2023년부터 5년마다 공동으로 이행 실적을 검증하고 각국의 목표를 재설정한다는 약속 이상이 제시되지 않아, 영국의 조지 몬비오는 <가디언>의 칼럼을 통해 이번 합의가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기적이지만, 해야 할 것에 비해서는 재앙이라고 평함.
- 합의문은 긴 협상 과정에서 초안에 포함된 정도의 구속력도 잃게 되는데, 예를 들어 손실과 피해(8조)에 대해 선진국들이 법적 책임과 보상 개념을 거부하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재정(9조) 역시 조달 방법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선진국이 부담하고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정리함. 다만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를 조성하는 지금의 목표를 유지하고 이후 그 이상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기로 함.
- 결국 파리 합의는 55개국 이상의 비준과 함께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되는 국제법적 성격을 갖지만, 합의를 위배할 경우 국제적 평판 하락이나 도덕적 지탄 외에는 공식적 처벌이나 제재가 없는 상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는 ‘파리 이후’의 해석과 후속 논의가 많은 어려

움을 노정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

– 파리 합의를 둘러싼 자본의 도전 속에서 대안을 찾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과 기술적 수단 및 기후 재정 마련에 있어 기업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번 파리 총회 후원사에 에어프랑스, 핵발전과 석탄화력 발전 사업을 하는 EDF(프랑스 전력공사), 화석연료 금융사업을 하는 BNP 파리바스 등이 참여했고, 그 결과 기후협상이 투자기회를 잡는 무역박람회와 같아졌다는 비판도 제기됨.
- 이번 파리 합의가 각론과 방법론이 결여된 만큼 향후 책임과 보상을 위한 기후 재정 문제가 주요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 조성될 기후기금이 화석연료 사용의 실질적인 감소와 기후정의 실현보다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한국 언론 다수가 파리 합의 타결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감축 부담이 한국경제에 미칠 부담을 우려하고 탄소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주로 관심을 두고 있음. 사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BAU(현 추세 지속) 대비 37% 감축 목표는 경제단체들의 업살과 달리 실제로 큰 부담이 되지 않고, 따라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전략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그 만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탄소배출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오히려 파리 합의가 정부의 핵발전 확대 드라이브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음.
- 파리 합의는 유엔 기후체제를 살리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중요한 결정들에는 5년의 유예를 둬으로써 이후 많은 논의가 필요함. 이런 가운데 유엔 체제와 국가나 기업의 대응 움직임과는 별개로, 민간 영역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과 에너지 자립과 연대의 노력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계 여러 곳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와 먹거리 관련 생산과 소비 협동조합, 에너지 전환마을 운동 등 지역에 기반하면서 지역을 가로지르는 결사체들의 대안적 활동 사례들을 통해 파리 협약 이후 기후정의 체제의 청사진을 찾아볼 수 있음.

유리병 재활용정책 동향과 재사용 활성화 방안¹⁰⁾

- 우리나라는 유리병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용기보증금 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빈용기보증금 제도와 EPR제도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독립적인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주류나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빈 병을 가져올 때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 제조사 → 도매점 → 소매점 → 소비자의 유통과정을 거슬러서 빈 병이 소비자 → 소매점 → 도매점 → 제조사로 반환되도록 하는 제도로, 제조사는 반환된 빈 병을 세척해 다시 사용함으로써 신병 구입원가를 절감하고 신병제조에 소요되는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음.
- 제조사가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채택할 경우 출고량 대비 빈 병을 80% 이상 회수해야만 함.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80% 대비 미회수량만큼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해서, 이 제도는 안정적인 회수체계를 갖춘 제조사 경우에만 채택할 수 있음.
-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는 EPR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¹¹⁾
- 제조사는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은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재활용분담금으로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장재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제조사가 빈용기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유리병의 경우 재사용 포함)할 경우에는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EPR유리병의 세척 및 재사용 실적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한 실정임. 박카스, 비타500 등 드링크병을 중심으로 세척·재사용비율이 20% 가까운 점유율을

10) 정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1) 역으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EPR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차지한 적이 있었으나, 유리병 세척·재사용을 겸하던 일부 영세제약회사에서 위생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세척병으로 저가음료를 만들어 약국에 판촉용으로 공급해 온 것이 문제가 되면서, 광동제약, 동아제약 등 대기업에서 유리병 재사용을 포기해 유리병 세척·재사용 시장이 붕괴되어 버렸다. 유리병 세척·재사용은 세척설비라든 설치가 필요한 장치산업인데, 한 번 라인을 철거하면 이후 재도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국내 EPR제도는 재활용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재사용 촉진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EPR유리병 재활용실적의 97%가 유리병 제조원료(cullet)의 재활용인 상황임.

- 빈 병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정부(환경부)는 올 1월 2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면서,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업무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함.
- 또한 올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빈용기보증금 인상안, 즉 소주병 40원에서 100원,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1년 연기해서 2017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함.
-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주류병(소주병과 맥주병)과 청량음료병의 보증금이 낮아 대부분 소비자들이 판매점으로 빈 병을 가져오지 않고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해 버리고 있어, 보증금을 인상해 소비자들이 빈 병을 판매점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것임. 실제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빈용기보증금 병은 유리병 재활용업체에서 다시 선별되어 제조사로 가서 재사용되고 있는데, 판매점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후 다시 제조사로 반환되는 경우 파손율이 높아 재사용 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판매점으로 제대로 반환된 빈 병이 20번 이상 재사용된다면,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후 제조사로 반환되는 빈 병은 8번 미만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실정임.
- 다만, 단순히 빈용기보증금 인상만으로 빈 병의 회수체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도 있음.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되면 일시적으로는 판매점 반환비율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심리적 안정기가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소비자의 행태를 바꾸기에는 보증금 100원 인상은 너무 적다는 지적과 인상된 비용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빈 병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 이익이 되므로 빈용기보증금은 제도적인 강제가 아니라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음. 일본, 독일, 벨기에 등 많은 국가들은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업계자율로 빈용기보증금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빈용기보증금 체계를 제도화시켰는데, 오히려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빈 병의 재사용이 제약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80% 회수의무라는 강제규정으로 신규 품목의 진입을 막고 있고, EPR제도에서는 빈 병의 재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함. 또한 판매점 회수체계만을 고집하면서 판매점 밖에서 ‘공병상’을 통해 회수되고 있는 빈 병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한살림의 경우 조합원과 함께 ‘병재사용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 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빈 병을 반납하는 조합원에게 출자금 50원을 적립해주고, 안성 물류센터에 빈병을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2015년 회수된 재사용병은 총 6종 252,485개이며 회수율은 20.0%임. 현재 EPR 제도에 따라 한살림 역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 190,298,900원을 납부하였음. 앞으로도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절약을 위한 환경실천 활동으로서 병재사용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동향분석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4호

펴낸이 박맹수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펴낸날 2016년 1월 25일



동향분석 보고서
모심의 눈 살림의 길 제14호